

# “동학지도자 유골 반환하라” 법적 다툼

진도군 “연고지에서 후손과 협의해 사업진행하는게 순리”

전주시 “방치하다 이제와 달라는 건 억지”…안장식 치러

진도군과 전북 전주시가 동학 기념 사업 추진을 위해 125년이 지난 동학 지도자 유골을 놓고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진도군과 전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전주시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상대로 한 유골인도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최근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21일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유골 현상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이 5월30일 기각된 이후 정식 제기된 본안 소송이다.

진도군 측은 소장에서 “이 사건의 유골이 진도군 출신이라는 점에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연고자’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면, 원고들(진도군)은 피고들(전주측)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면서 “유골이 일본으로 불법반출되던 1906년 당시 유골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바로 진도군이므로, 불법으로 해외에 반출된 유골은 원래 위치하고 있었던 진도군으로 반환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도군이 청구소송을 제기한 유골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에 처형된 무명의 농민군 지도자로 추정된다.

이 유골은 1906년 목포면화시협장 기시였던 일본인 사토 마사지로에 의해 일본 훗카이도대로 반출됐다.

이후 90년이 지난 뒤인 1995년 일본 북해도대학의 표본창구에서 다시 발견되면서 유골의 존재가 알려졌다.

당시 유골 상자에는 ‘메이지 39년(1906년) 진도에서 효수한 동학당 지도자의 해골, 시찰 중 수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복해도 대학교 협의를 거쳐 이듬해 유골을 국내로 봉환했지만, 신원 확인에 실패하면서 23년 동안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해 왔다.

이후 전주 안장 계획이 전해지자 진도군이 본격적으로 반환 운동에 나섰다.

진도군과 군의회는 유골이 돌아오면 전시관과 역사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서 유골 반환을 적극 요청해 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우선 유골에 대한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 지면 DNA 검사를 통해 후손을 찾아 그들의 뜻에 따라 안장 등 기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도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측은 “전주시가 유골을 화장해서 묻으려는 계획을 알게 돼 2015년부터 반환 요청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진도에 알리지도 않고 6월1일 안장식을 강행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를 기리고 참여자와 후손을 밝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유골이 진도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진도에서 출토돼 도굴된 만큼, 연고지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동안 진도군에 몇 차례 안장 의사를 타진했지만, 군수부재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답을 주

지 않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협의 끝에 전주에 안장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1일 전주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안장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유골 안장식은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빌인 의식을 시작으로 용버리고 개와 전리감영을 거쳐 전주읍성 관문인 풍남문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완산칠봉에 조성된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서 진흔행사를 여는 등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동안 전주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전적지인 완산공원과 곤자산 일원에 기념 공간을 조성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비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순국선열들의 얼굴을 기습 속에

18일 오전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3.1운동, 상해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순국선열 인화전—그리고 100’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소송 6년 만에 최종 승소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메타프로방스는 ‘담양 속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담양군이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일대 13만5260㎡의 부지에 유럽풍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바씨 등 원 토지소유자 2명이 2013년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했으나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 7월11일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 미달과 ‘법인 조개기’를 통한 공익성 훼손, 공익성 결여 등을 이유로 원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에서 인가 처분 무효 판결을 받은 담양군은 변경고시, 공공성을 강화한 조성계획, 사업자의 재지정 등 대법원이 지적한 행정적 하자를 보완했다며 지난 2017년 9월28일 프로방스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를 다시 고시했다.

군의 결정에 박씨는 국토계획법령

이 정하는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과거의 판결 등을 보면 A업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데도 A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익성을 가진 도시균형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박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심리불속행기 각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원고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징검다리 연휴 전남 곳곳서 추돌사고 잇따라

광복절로 징검다리 연휴를 맞은 17일 전남 곳곳에서 추돌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12시12분쯤 여수 율촌면 취적터널(순천방향)에서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서가던 쌈티페 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은 제네시스가 쌈티페를 들이받았을 때 앞에 가던 차량 4대를 들이받았고 사고 현장을 또 다른 소나타 차가 덮치면서 총 7대의 차가 터널에서 뒤엉킨 것으로 보고있다.

이 사고로 제네시스 운전자 A씨(43) 등 총 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모두 연휴를 맞아 각지에서 온 나들이객으로 알려졌다. 대낮에 익스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일대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

또 이날 오전 8시43분쯤 함평 손틀면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천지휴게소 인근에서 새우를 운반하던 1.5톤 활어 운반 트럭이 넘어졌다.

트럭이 넘어지자 뒤따른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A씨(49)와 승용차 운전자, 동승자 등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활어 운반 트럭에 실려었던 새우가 도로로 쏟아져 고속도로 일대가 1시간여 교통체증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트럭 타이어가 평크가 나면서 사고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만취 20대, 차량 5대·오토바이 운전자 추돌

술에 만취해 운전을 한 20대가 차량 5대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경찰에 연행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음주 운전으로 차량 5대, 오토바이 1대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48분쯤 광주 서구 한 번화가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도로에 주차된 차 5대와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잇따라 충격한 후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 한대를 들이받은 A씨는 유턴을 한 후 차량 두 대를 추가로 충격하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4)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 광주천서 40대 남성 변사체 발견…경찰 수사

광주천에서 40대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광주천 인근에서 낙사체의 신고로 40대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이날 광주천으로 낙사를 나선 A씨(34)는 강 중앙에 떠있는 시체를 발견하고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물 위에 떠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시체는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정확한 사망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30도를 웃드는 날씨로 인해 부폐상태를 보고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 “부검을 통해 외상과 사망 시점 등이 명확히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40대 전후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 확인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 호프집 화장실 통로 몰래카메라 설치 7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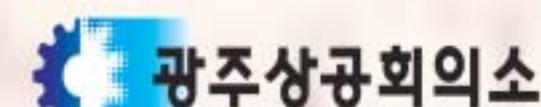
호프집 화장실 통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활용) 혐의로 A씨(7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목포시 보광동 한 호프집 화장실 통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달 14일까지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용산 한 전자상가에서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구입했고 지난달 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은 호프집 주인이 지난 14일 자동차 리모컨 형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탄로났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